

국민의 소중한 의견 해양수산 정책으로 만듭니다

-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6건 발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주력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에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과제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채택되었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근무예비역*(이하 예비역) 통보제도 개선'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 편입 : 선사 등 업체장의 추천에 따라 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할 것을 결정하는 제도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 과제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장려상 수상 과제로는 생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 검사방식 개선', 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연령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규제 완화' 등 3건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44-200-516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166)



붙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 응모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과에서 추진계획 마련 예정이며, 세부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우수과제 : 총 6건 [1등(1건, 100만원), 2등(2건, 50만원), 3등(3건, 30만원)]

연번	제 목	주요내용	소관부서
1 (최우수)	승선근무예비역 통보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선원에 대하여 예비역 지정 여부 안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대상자 불편 발생 * (예) 선사를 통한 승선근무예비역 지원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선사 측에서 “예비역으로 정상 편입되었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 ⇒ (개선) 병무청과 협업하여 예비역 지정여부 확인 채널을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착오발생 방지 및 편의 도모 * 해수부-병무청 간 업무협조를 통한 연계시스템 마련 등 	선원정책과 (장영일 事 044-200-5741)
2 (우수)	신고어업 요건 관련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신고어업의 요건으로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원정물질이 제한되어 영세 어업인 생계유지 곤란 ⇒ (개선)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 주소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어업정책과 (윤재웅 事 044-200-5520)
	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소금제조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소금산업 종사자의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는 가입 가능하나, 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서는 제외되어 조합원으로 가입이 어려움 ⇒ (개선) 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소금제조업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수협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검토 	수산정책과 (이상윤 書 044-200-5429)
3 (장려)	해양오염물질 방제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제품 출하 시마다 추가 검정을 받아야 하여 수수료, 검사기간 등 부담 가중 ⇒ (개선) 출하 전 매번 검정을 받는 방식에서 유통중인 자재·약제 중 무작위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검증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업체부담 경감 및 관리 효율성 증대 	해양환경 정책과 (유해주 書 044-200-5281)
	청년어업인 연령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청년어촌정착자금(청년귀어인 포함)은 창업초기 청년의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법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개선) 최근 지자체별 청년의 나이 제한을 44~49세까지 확대하는 추세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의 연령 상향 검토 추진 	어촌어항과 (김건호 事 044-200-5662)
	근해채낚기 어선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근해채낚기어선에서 갑판상 구조물인 바람막이 구조물도 어선 톤수에 산입되어, 어선검사를 받는 시기에 어업인들이 철거하였다가 재설치하는 등 불편 발생 ⇒ (개선) 향후 TAC 중심의 어업관리정책이 정착될 경우, 바람막이 구조물의 톤수 산입 관련 어업규제 완화 검토 	어선안전 정책과 (사지원 事 044-200-5551)